

지식공유

2026
VOL. 02

Brief

[지식공유브리프 아카이브 바로가기](#)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

코끼리 대해부 '개발협력에서 국익'



독일 개발협력 개혁과
한국 지식협력에의 함의



AI 협력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무역 데이터로 본 협력의 출발점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우루과이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향후 협력과제



LSE Data Science Institute Brief



KSP 포커스

[25/26 우즈베키스탄 KSP]

스타트업으로 여는 성장 전환:

우즈베키스탄과 KSP의 새로운 도전



CID 연구포커스

개발도상국 물가 생산성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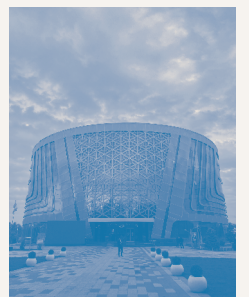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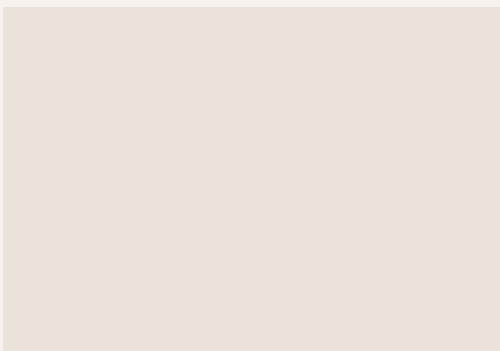
YKSP 소식

YKSP 9기 제1차 포럼 개최 결과 및 시사점



행사

폴란드 인공지능(AI) 세미나 개최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코끼리 대해부 '개발협력에서 국익'



개발연구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sohee.kim@kdi.re.kr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는 모두가 그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문제를 뜻한다. 개발협력에서 '국익'이 바로 그런 개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이 개발협력과 국익을 공세적으로 연결 짓는 모양새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터놓고 논의하는 자리는 여전히 드물다. 이에 개발협력에서 국익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5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방 안의 코끼리' 국익, 더는 외면 어려워

1990년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부처장을 역임한 캐럴 J. 랭커스터는 공여국의 전통적인 개발원조 동기를 ▲외교(diplomatic) ▲개발(developmental) ▲인도주의적 구호(humanitarian) ▲상업(commercial) ▲문화(cultural) 등으로 분류했다.¹⁾ 이렇듯 역사적으로 공여국이 개발원조를 통해 외교적·상업적·문화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익을 염두에 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던 시기 미국은 냉전 체제하에 마셜플랜의 근거인 경제협력법(Economic Cooperation Act of 1948)을 제정하면서 국익을 목적에 포함했다. 영국 역시 식민지와 속령과의 관계 변화 속에서 1965년 『해외개발부 백서(Overseas Development: The Work of the New Ministry)』에 '원조가 영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공여국 전반에서 개발협력과 국익을 직접적으로 연계해 온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도 최근해야 국익을 공식 문서에 명기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2010년대에 각각 『기회를 만들자-미래를 발전시키자』(2011)와 『개발협력 대강』(2015)에서 국익을 언급했다. '이타적 공여국'의 상징이었던 스웨덴마저 정책 기조 변화 이후 2023년부터 '스웨덴의 이익'을 개발협력의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도 같은 흐름 속에서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부터 개발협력과 국익을 연관 지었다.

특히 최근 5년간 공여국들의 표현 수위는 높아졌고, 자국의 핵심 이익을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개발협력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 국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대강을 개정했다. 이는 2015년 대강에서 국제 평화와 번영 등의 글로벌 공공재가 곧 국익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썼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양새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²⁾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³⁾는 공식 발표자료를 통해 ODA 예산 삭감의 이유로 국익을 언급했다. 독일과 한국은 '우리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며(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미래, 2026)'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026)' 등의 유화적이지만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공여국들이 국제무대에서까지 국익을 가시화하는 이유는, 국제사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자국 내 정당성 확보라는 시각이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이어지면서 국방 예산은 늘었고,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재정 여건은 악화했다. OECD에 따르면,

1) Carol Lancaster,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007.

2) Marco Rubio, "Making Foreign Aid Great Again," U.S. Department of State, 1 July 2025, <https://statedept.substack.com/p/making-foreign-aid-great-again>.

3) Prime Minister's Office, Prime Minister Sets Out Biggest Sustained Increase in Defence Spending Since the Cold War, 25 February 2025,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sets-out-biggest-sustained-increase-in-defence-spending-since-the-cold-war-protecting-british-people-in-new-era-for-national-security>.

2025년 ODA 재원은 전년 대비 23.1% 줄어 역대 최대 연간 감소율을 기록했다.⁴⁾ ODA의 가치적 측면만 내세우기에는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공여국 정부로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ODA의 정당성을 납세자에게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개발협력에서 국익'이란 무엇인가

이렇듯 개발협력에서 국익을 언급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거세졌는데도 그 정의는 여전히 추상적이다. 공여국이 '개발협력 맥락'에서 국익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표 1 범정부·안보적 차원의 국익 정의>

한국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로 유추 가능
미국	먼로 독트린 확장, 외국 세력 견제 및 경제 안보, 유럽권 동맹 질서, 중동 억제, 기술 패권
일본	국가 존립·국민 안전, 경제적 번영, 인도-태평양 자유질서 수호
영국	국민의 장기적 안보와 사회적·경제적 복리
독일	국가동맹 방위, 자유민주주의 보호, 사회적 시장경제 수호, 국제규범, 세계평화, 지속가능성, 자유무역질서
스웨덴	주권, 국민 생명·건강, 국가동맹 방위, 사회기능 유지, 보편 가치 수호

자료: 저자 작성.

'개발협력에서 국익'에 대한 정의를 유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범정부 차원의 국익'을 참고하는 것이다. 개발협력과 달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대다수 정부가 국익을 정의한다.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국민·국가·동맹의 안보, 경제 안보·번영 등을 공통된 국익의 요소로 제시한다. 한국은 아직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그 대신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서 국익이 20번 언급된 점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국정목표 2)'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국정목표 5)' 등의 내용에서 국익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둘째는 개발협력 전략·정책·과제에서 국익과 연계된 내용을 추출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수록된 '상생의 호혜적 ODA' 등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과 5개국의 최신 전략을 검토한 결과, 개발협력 맥락에서 국익이 구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크게 ▲외교·안보 ▲경제 안보 ▲산업/민간 부문 ▲패권·규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국가별 동향에 따른 '개발협력에서 국익' 구성 요소(안)>

외교·안보	국제사회 내 영향력 확대 / 인접국·동맹국 평화 구축 / 전쟁·분쟁·재난 대비 상호 지원 관계 구축 / 재외 국민·기업 보호 / 이민자 유입 조절 등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화 / 핵심 자원 확보·개발 / 전략 산업 육성 / 해양 안보·항행 보장 등
산업/민간 부문	기업의 해외 진출 / 신규 시장 창출 /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기회에서 기술 육성 및 혁신 파트너십 구축 등
패권·규범	자국의 정치·경제·가치 체계 확산 / AI,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신규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선점 등

자료: 저자 작성.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국제사회 내 영향력 확대와 입지 제고라는 전통적 요인이 확인됐다. 한국은 ODA를 정상외교와 연계했고, 일본은 국제기구 선거나 주요 현안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할 신뢰

4) OECD, Prelimina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Levels in 2025, DCD(2026)8, OECD Publishing, Paris, 2026, [https://one.oecd.org/document/DCD\(2026\)8/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2026)8/en/pdf).

자산 구축을 방침으로 삼았다. 아프리카·중동 분쟁의 영향권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인접국 평화 구축과 이민자 유입 조절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난 발생 시 개발도상국과 상호 지원 관계 구축, 재외 국민·기업의 활동 여건 개선 등 자국민 안전과 직결된 요소도 포함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업 해외 진출, 신규 시장 창출, 첨단 기술 육성을 염두에 둔 민간 기업, 투자, 무역, 금융 연계 전략이 한국과 5개국 모두에서 나타났다.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자원 확보, 전략 산업 보호와 같은 경제 안보 요소도 두드러졌다. 최근 호르무즈해협 사태로 그 심각성이 재확인된 해상교통로 확보를 ODA 전략의 일환으로 포함한 국가도 있었다.

패권·규범 측면에서는 자국의 정치·경제·가치 체계를 확산해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됐다. 한국은 AI와 문화를 새로운 ODA 중점 분야로 추가하면서 경쟁 우위를 지닌 산업군에서 표준을 지향하는 모습이다. 자국의 체제 변화(사회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개발협력 기조에 반영하는 국가도 있었다.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나 기후변화 담론, 자유무역질서와 보호무역주의 역시 이를 유지·확산하려는 국가와 이탈적 태도를 보이는 국가로 양분되는 양상이었다.

여러 요소가 결합된 접근도 있었다. 분쟁 지역 재건(안보) 과정에 자국 민간 기업을 진출시키는 방안(경제)이나, 기후변화 대응(규범)에 적합한 기술력을 갖춘 자국 기업(산업)의 진출을 장려하는 논리가 등장했다. 두 사례 모두 평화나 기후변화 같은 가치 지향적 목표에 상업적인 요소를 결합한 형태이다.

이렇듯 개발협력 맥락에서 국익은 복합적인 개념이다. ‘방 안의 코끼리’를 수면 위로 꺼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개념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에 그 정의와 구성 요소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이는 정치경제학자들이 설명하는 국익의 특성과 일치한다. 국익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안보·번영·사회 안정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상호의존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국내 정치·경제 상황과 국제 환경에 따라 재구성되는 동적 개념이라는 것이다.⁵⁾

5) Rawi Abdelal and Jonathan Kirshner, "Strategy, Economic Relations, and the Definition of National Interests," *Security Studies*, Vol. 9, Nos. 1-2 (1999), pp. 119-156.

<표 3 개발협력 차원의 국익 표현 양상>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국익 전면화 배경	'25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재부각	'24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자국 우선주의 강화	'22 국가안보전략에 ODA 편입	'25 국방 예산 확대 및 분쟁 지역 집중	'23 글로벌 여건 변화 속 영향력 확대·전략적 대응 강조	'23 시장경제 중심의 우파 정부 집권
최신 문서에서 국익 표기 방식	"ODA 기본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의 호혜적 ODA'"	"미국의 원조산업과 관료체계는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으며"	"제2항 개발협력의 목적 (중략) 일본의 국익 실현에 기여함"	"영국의 가치와 국익을 반영하는 사항에 중점을"	"개발정책은 가치에 기반하되, 동시에 우리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며 추진"	"개발협력이 스웨덴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하며"
국익과 연계된 전략·정책·과제 등(요약)	정상급 외교 연계, 중점 분야에 AI·문화 추가, 혁신 기술 사업 지원, 민간 부문 참여 등	개발 금융 강화, 핵심 광물 투자, 기후-젠더 국제기구 탈퇴 등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재외 일본인·기업 보호, 기업 진출, 공급망 안정화, 자원 확보, 재난 발생 시 협력 관계, 물류·에너지 항로 보호 등	분쟁 지역 집중, 기후·보건 분야 선택적 유지, 무역·투자 중심, 연구기관의 지식·기술 이전 등	안보 관련 지역 집중, 분쟁 지역 재건에 기업 진출, 공급망 안정, 자원 확보,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등	이민정책과 연계, 녹색·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민간 기업 진출 모색, 시장경제 확산 등
분류	외교·안보, 산업/민간 부문, 규범·패권	산업/민간 부문, 경제 안보, 규범·패권	외교·안보, 경제 안보, 산업/민간 부문	외교·안보, 산업/민간 부문	외교·안보, 경제 안보, 산업/민간 부문, 규범·패권	외교·안보, 산업/민간 부문, 규범·패권

자료: 저자 작성

전략 수립·이행 단계에서 적용 수준 검토해야

코끼리를 정의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해야 한다. 이는 ▲범정부적 공식화 ▲개발협력에서 정의 ▲구체화 및 전략화라는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익의 구성 요소를 여타 공여국처럼 공식화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외 여건을 반영한 외교·경제·안보 등 다부문에 걸친 정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범정부적 국익을 정립하더라도 이와 연계해 개발협력 차원의 국익을 정의할지, 아니면 독자적인 정의를 마련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글로벌 이익이나 수원국 필요와 상충하는 요소가 범정부적 국익에 포함된다면 ODA의 속성상 그대로 내재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⁶⁾ 학계에서는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인 국익 접근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⁷⁾

이 맥락에서 국익과 글로벌 이익, 수원국의 필요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한 선례들은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국가안보전략에 ▲국제규범 준수 ▲세계 평화의 지속가능성 ▲자유무역질서 유지를 핵심 국익에 포함했고, 해당 내용을 ODA 전략에서도 언급했다. 일본 또한 인도-태평양의 자유·평화 질서를 국익이자 글로벌 이익으로 간주하고, 국가안보전략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모두에 반영했다. 스웨덴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술력이 투입돼야 수원국의 이익과 원조 효과성이 비로소 담보된다는 인과적 논리를 제시한다. 앞선 사례들은 국익이 ODA의 가치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나아가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국익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여 전략 수립·집행·평가 체계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ODA 평가의 주요 기준이었으나, 국익이 사업 목표로 추가되면 정책적 복잡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가별, 지역별, 분야별로 세분화된 정의와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원의 전략적 배분과 실행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개념 정비를 넘어 개발협력 거버넌스 전반의 재설계를 수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재설계가 국제개발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익을 사업 설계에 직접 반영한다면, 수원국의 자립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이 지향하는 가치들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익의 전략적 반영을 유보하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지이다.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수원국의 발전이 국제 평화 질서 형성과 협력 관계 증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여국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적 접근을 견지하는 방식이다. 국익 전면화가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아 가는 상황에서도, 그 수용 범위와 추진 속도는 여전히 각국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 ■

6) Nilima Gulrajani and Rachael Calleja, Understanding Donor Motivations: Developing the Principled Aid Index, ODI Working Paper 548,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London, March 2019. <https://media.odi.org/documents/12633.pdf>.

7) Mikhail Troitsky, "Why Are National Interests Necessary?", Russia in Global Affairs, No. 2 (April/June 2015), <https://eng.globalaffairs.ru/articles/why-are-national-interests-necessary/>.

독일 개발협력 개혁과 한국 지식협력의 함의



우혜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평가팀장

hywoo@kdi.re.kr



백진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총괄운영팀장

jypack@kdi.re.kr

1. 개발협력 환경 변화와 담론의 전환

2026년 1월,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신규 개발협력 전략인 '함께 만드는 글로벌 미래 (Shaping the Future Together)¹⁾'를 발표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공식화했다. 이번 전략에서는 개발협력을 통한 국익 창출을 명문화하는 한편, 전략적 집중과 파트너십 기반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개혁안은 국제적 연대를 단순한 '도덕적 사치'가 아닌 자국의 평화·안보·복지를 위한 '전략적 필연성'으로 재정지함으로써 개발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공여국이 ODA 예산을 축소하고 국익 중심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OECD는 독일의 행보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OECD는 독일이 예산 압박에 대응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전정부적(whole-of-government) 조정을 강화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제 연대와 국익의 상호 연계성(interconnected benefits)을 입증하는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영향력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²⁾

2. 독일의 개발협력과 지식협력의 역할

전통적으로 가치 중심 접근을 견지해 온 독일 개발협력은 기술협력 분야에 강점이 있으며, 지식 기반의 정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단순한 재원 투입을 넘어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국의 제도적 역량 강화와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기술협력은 독일의 차별화된 역량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를 중심으로 기획-집행-평가의 분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하 시행기관인 국제협력공사(GIZ)와 독일개발은행(KfW)은 각각 기술·제도 협력과 금융·물적 지원을 분담하며 상호 보완적 구조를 형성한다. GIZ는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혁 지원, 행정·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협력국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KfW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며 자회사인 독일투자개발공사(DEG)를 통해 민간 부문의 개도국 및 신흥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³⁾ 독일은 지식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독일국제개발연구소(IDOS), 독일개발평가원(DEval), 독일글로벌지역연구소(GIGA) 등 독립적인 연구·평가 기관을 육성해 왔으며, 이들은 객관적인 정책 분석과 성과 평가를 수행하며 독일 개발협력의 근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뒷받침하고 있다.⁴⁾

독일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내 ODA 총액 기준 세계 2위 공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의 재정 건전화 기조와 맞물린 국내 지지기반 약화에 따라 개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독일의 ODA 기여액은 전년 대비 실질 기준 17.2% 감소한 324억 달러이며, BMZ와 외교부의 관련 예산이 각각 15%와 18%씩 삭감되는 등 재원 축소가 본격화하고 있다.⁵⁾ 이러한 재정 압박과 더불어 대규모 원조의 당위성에 대한 대중의 지지 하락은 '국익 연계형' 담론으로 전환을 가속화한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1) BMZ, "Shaping the Future Together Globally", BMZ 홈페이지, 2026.1., <https://www.bmz.de/en/ministry/shaping-the-future-together-globally-282836>.

2) OECD, "OECD Mid-term Review of Germany", OECD 홈페이지, 2025.6., <https://one.oecd.org/document/DAC/DAC/AR%282025%293/1/en/pdf>.

3)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한국 ODA의 전정부적 조정방안 연구: 주요 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2026(발간 예정).

4) BMZ, "Shaping the Future Together Globally", BMZ 홈페이지, 2026.1., <https://www.bmz.de/en/ministry/shaping-the-future-together-globally-282836>.

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Germany, OECD 홈페이지, 2025.6.11.,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04b376d7-en/germany_460a37b1-en.html.

복합적인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자 마련된 독일의 신규 개혁안은 개발 정책 이행 구조의 현대화와 함께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빈곤·불평등 퇴치, 다자협력과 같은 기존의 규범적 가치를 넘어 '안보·평화'와 '경제협력'을 핵심 목표로 전면에 내세운 점은 이번 개혁이 지향하는 전략적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번 개혁안이 제시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식협력이 핵심 이행 기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 목표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민간 참여 확대, 공정 무역, 현지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은 협력국의 제도적 인프라와 역량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실효성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협력과 금융지원 간 유기적 연계가 한층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제도 설계와 역량 강화 단계에서 지식협력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대표적 기술협력 수행기관인 GIZ 역시 개혁 방향을 환영하며 전략적 개발협력의 핵심 요소로서 지식협력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GIZ는 "우리는 각 국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 정치·정책 분석 역량,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제공한다"라고 언급하며, 기술협력의 본질이 정책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전략적 지식 공유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 GIZ는 독일의 접근 방식이 "가치에 기반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협력이며, 이로써 독일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라고 평가하면서, "50년 이상 축적된 국제협력 경험과 네트워크가 이러한 수행 역량의 기반이며, 앞으로는 민간 부문과 협력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⁶⁾

예산 축소 국면에서 지식협력은 적은 자본으로도 협력국의 자생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국의 경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고효율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인도주의적 가치와 현대적인 국익 중심의 경제협력을 잇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로서, 지식협력의 역할과 위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한국 지식협력의 방향

독일 사례는 한국 개발협력 정책에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협력 프로그램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지난 20여 년간 협력국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협력국과의 신뢰 기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정책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협력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성과도 축적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KSP는 한국 개발협력의 중요한 지식 기반 협력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 속에서 한국의 지식협력 역시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개발협력 정책과 외교·경제 정책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경제 인프라 지원 및 경제협력 사업과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협력은 단독 사업이 아니라 금융협력, 투자, 경제협력과 결합될 때 정책적 효과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외정책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근거 기반 제공 기능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협력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분야별 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성과 논리 경로(results pathway)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 체계는 지식협력 사업이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 전략적 개발협력 수단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독일은 기술협력이 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개혁 전략에서도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 속에서 한국 역시 지식협력을 더욱 비중 있는 정책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협력국과 장기적인 정책 파트너십과 신뢰 구축을 도모하며, 경제협력과 연계된 개발협력 모델을 지원한다면, 지식협력은 향후 한국 개발협력 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6) GIZ, "KfW Bankengruppe and GIZ welcome BMZ's reform plan", GIZ 홈페이지, 2026.1.12., <https://www.giz.de/en/newsroom/news/kfw-bankengruppe-and-giz-welcome-bmzs-reform-plan>.

AI 협력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무역 데이터로 본 협력의 출발점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hkbang@kdi.re.kr

2026년~2028년 EDCF 중기운용 방향에서는 한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개도국 지원수요가 큰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 등을 중점분야로 선정하였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시그니처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협력국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특히 AI 같은 분야는 전력, 통신 인프라, 인적자원 수준 등 국가별 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를 선별한 이후 해당 국가에 적합한 분야를 매칭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동일한 분야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수요의 성격과 산업적 기반이 상이하여 적절한 국가를 선별하지 못하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크게 제약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협력 대상국과 분야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가 다음 질문으로 연결된다.

AI 국제협력은 흔히 기술 이전이나 플랫폼 확산 문제로 다뤄지지만, 실제로는 국가 간 소득 혹은 기술 격차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기술 수준이 유사한 국가 간 협력에서는 표준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중심이 되지만, 기술 격차가 큰 경우에는 기술 이전과 인프라 구축이 협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협력 방식의 차이는 결국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는 기반의 차이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 시 흔히 나타나는 기술 격차가 존재할 경우, AI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의 이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협력의 토대는 서버, 전력,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부품과 장비가 이동하는 무역에서 먼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AI 관련 무역은 단순한 무역 통계를 넘어, 국가간 산업적 연결성과 잠재적 협력 네트워크를 보여 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특정 국가가 한국으로부터 AI 관련 장비를 많이 수입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한국과의 기술적, 산업적 연계 가능성을 일정 부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한국의 AI 관련 품목 대상 개발도상국가와의 수출입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이 이미 어떤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한편,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호혜적 상생협력 기조하에서 잠재적 협력국을 탐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다음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AI 관련 품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상품 이동은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 분류 체계로 식별된다. HS 코드는 6단위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분류를 따르나, 그 이상의 세분류는 각국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용된다. 따라서 국가 간 특정 상품의 이동을 파악할 때는 HS 6단위 코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AI 관련 품목의 경우, 동일한 장비가 AI 목적 외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dual-use) 특성을 지닌 경우가 많아, 6단위 분류만으로는 실제 AI 용도의 교역량이 과대 계상될 여지가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AI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AI 관련 품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WTO(2025)와 Waugh(2026)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2025)는 AI 관련

품목을 공급망 단계별로 분류하는 생산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하며, 국제 공통 분류 체계인 HS 6단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Waugh(2026)는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품을 중심으로 AI 관련 품목을 정의하고, 미국 기준의 HS 10단위 세분류로 식별한다. 다만 두 연구 모두 일부 품목이 AI 용도 외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한계로 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산 네트워크 측면의 협력보다 국제개발협력 수단을 통한 AI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교역 구조보다 AI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품목을 식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품을 중심으로 분류한 Waugh(2026)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이 이미 어떤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Waugh(2026)의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AI 관련 품목을 한국의 HSK 코드에 적용하면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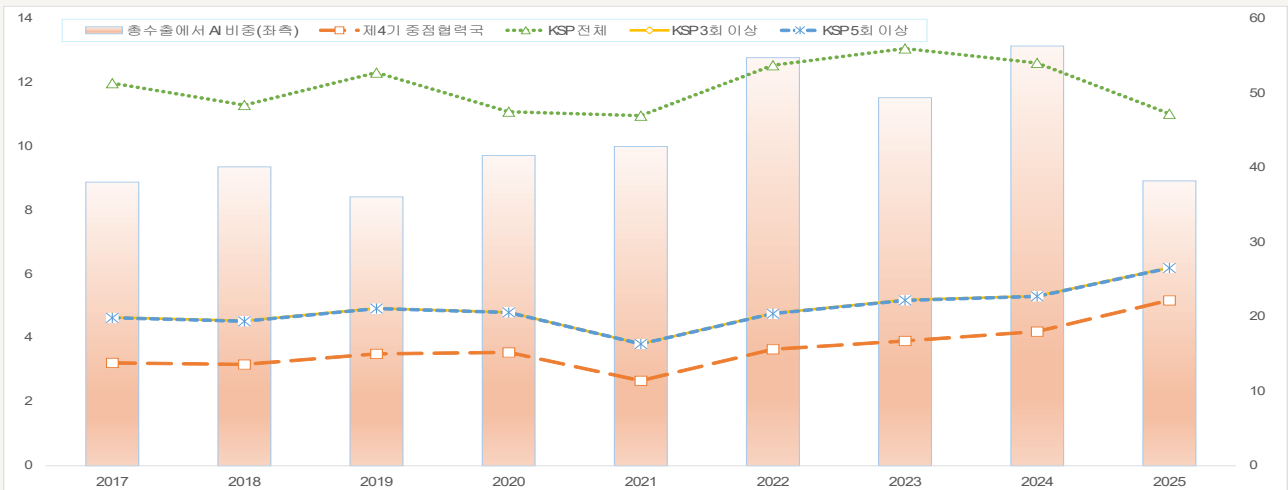
<표 1> AI 관련 품목: 데이터센터 기반 접근(HSK 10단위)

	HSK 코드	품목명	선정 근거(AI 관련성)
AI 연산 핵심 장치	8542.31.1000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AI 연산의 핵심 반도체로 데이터 처리 및 계산 수행
	8542.31.2000	하이브리드 IC	고성능 연산 및 신호 처리에 활용되는 핵심 집적회로
	8542.31.3000	Chiplet	AI 칩 구조의 핵심 구성요소로 고성능 컴퓨팅 지원
	8542.31.4000	MCO	복합 집적회로로 AI 연산 기능 통합
	8471.80.2000	GPU(비디오카드)	AI 모델 학습 및 추론을 위한 핵심 연산 장치
	8473.30.9010	CPU(8542 제외)	데이터 처리 및 시스템 제어 수행
데이터 저장	8471.70.1000	HDD	대용량 데이터 저장(AI 학습 데이터)
	8471.70.2020	HDD 드라이브	데이터 저장 기능 수행(일반 IT와 혼재)
	8471.70.2090	기타 저장장치	일부 AI 활용 가능
	8471.70.9000	저장장치 기타	데이터센터 저장 인프라
	8523.51.2090	SSD	고속 데이터 접근(AI 처리 지원)
네트워크 인프라	8517.62.1010	유선통신 장비	데이터 전송 인프라
	8517.62.1020	무선통신 장비	AI 시스템 연결
	8517.62.2030	유선통신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8517.62.2040	무선통신	네트워크 확장
	8517.62.3010	유선통신	데이터 흐름 제어
	8517.62.3020	무선통신	AI 시스템 연결
	8517.62.9010	서버 연결 장치	데이터센터 핵심 네트워크
	8517.62.9020	기타 유선	일반 통신 포함
	8517.62.9030	기타 무선	일부 AI 활용
배선 및 연결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초고속 데이터 전송(AI 인프라 핵심)
	8544.42.1010	통신용 전선	데이터센터 내부 연결
	8544.42.2010	통신용 전선	통신 인프라
	8544.42.9010	통신용 전선	제한적 AI 활용
전력 및 제어	8537.10.4000	배전 장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8537.10.5010	CNC 제어반	자동화 제어
	8537.10.5020	PLC	데이터센터 및 산업 자동화 핵심
부품 및 모듈	8473.30.2000	ADP 부품	컴퓨터 핵심 부품
	8473.30.4060	DRAM 모듈	AI 연산 메모리
	8473.30.4090	기타 보드	일부 AI 활용
	8471.80.9000	기타 카드	일반 IT 포함 가능
시스템	8471.50.1000	고성능 처리장치	AI 서버
	8471.50.2000	중간 처리장치	데이터 처리 시스템
	8471.50.9000	기타 처리장치	일부 AI 활용

자료: 저자 작성.

<표 1>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한국의 AI 관련 품목의 수출 비율 추이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한국의 총수출 대비 AI 관련 품목 비율은 2017년 8.9%에서 2024년 13.2%까지 증가하여, 수출에서 AI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을 보여 준다. 특히 전체 AI 수출에서 제4기 중점협력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8%에서 2025년 22.2%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KSP를 최소 3회 또는 5회 이상 참여한 국가들도 같은 기간에 그 비율이 19.9%에서 26.6%로 확대되었다.¹⁾ 국가별로 살펴보면, 제4기 중점협력국이면서 최소 3회 이상 KSP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가 가운데 베트남,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수출 대상국으로 나타난다.²⁾³⁾

그림 1 한국 AI 관련 품목의 수출 추이(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AI 관련 수출이 소수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 국가에 분산된 가운데 일부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이 이미 다양한 국가들과 산업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결이 AI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AI 협력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보다 기존의 무역 관계와 산업적 접점을 기반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은 한국의 AI 관련 품목 수출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협력의 출발점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국가군이다.

다만, 잠재 협력국을 도출하려면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역 데이터는 국가 간 산업적 연계성을 보여 주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전력·통신 인프라, 정책 환경, 제도적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실제 협력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간 무역 흐름은 협력국을 탐색하는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국가별 여건을 반영하여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이다. 아무런 기반이 없는 국가보다, 이미 일정 수준의 교역과 산업적 연계가 형성된 국가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다. AI 협력의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무역은 이러한 환경이 일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어디에 AI를 수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국가와 함께 AI를 구축할 것인가”여야 한다. ■

1) KSP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할 경우 중국으로 인하여 2017~2025년 동안 50.9%를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 수출 대상국으로 이 시기에 28.7%를 점유하고 있다.

2) KSP 협력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베트남, 인도 다음으로 높은 수출비중을 보이나 제4기 중점협력국가로 분류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높은 수출비중을 시현한 국가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으로 나타나나 수출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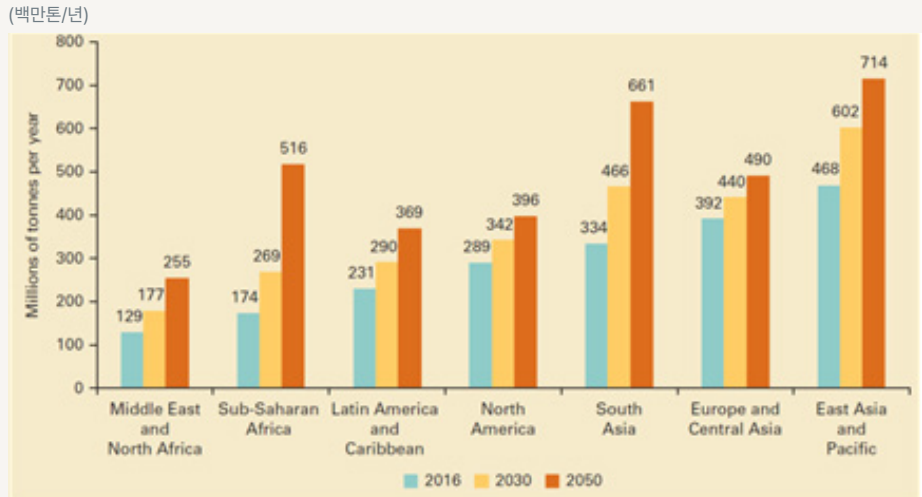
권유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1팀 전문연구원
ybkwon@kdi.re.kr

우루과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로의 전환과 향후 협력과제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전 세계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폐기물 발생량은 약 20억 톤이었으나, 2050년에는 약 34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과도한 폐기물 발생으로 매립지 포화, 비위생적인 매립지 및 인접 지역 환경,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환경 문제 또한 심화하는 실정이다.

그림 1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전망(Projected waste generation, by region)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 1) 2021년 우루과이 환경부에서 제정한 국가 폐기물 관리 계획(Plan Nacional de Gestion de Residuos, PNGR)의 액션플랜
- 2) 고품폐기물은 산업·가정·특수폐기물로 구분되며 이 중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연간 약 1.6백만톤)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한다.
- 3) 순환경제는 선형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등으로 제품, 자재 및 자원의 가치를 가능한 한 길게 유지하고,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하는 경제를 의미한다(유럽연합, 2023).
- 4) 화학적 변환 없이 물리적 방법만 사용해 폐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료로 만드는 재활용 방법이며, '수집-세척-분류-조각-생산-재활용 산업'의 공급-팰릿(pallet) 생산' 단계로 이루어짐.

우루과이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 12월 우루과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Uruguay + Circular¹⁾에 따르면 우루과이에서 연간 발생하는 고품폐기물²⁾은 약 420만 톤, 1인당 발생량은 약 1.2톤으로 추산된다. 우루과이의 1인당 고품폐기물 발생량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LAC) 주요국 중 인구와 경제 규모가 더 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보다도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우루과이 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또한 점차 가중되는 추세이다. 우루과이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12만 톤이었으나 2019년에는 약 21만 톤이 소비되었다. 이에 반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여전히 약 3.4%에 불과하다.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며, 일부는 불법적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처리 방식으로 발생하는 환경 피해는 해양 오염을 비롯한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표 1 우루과이 단일 사용 플라스틱 발생량 (단위: ton)

단일 사용 플라스틱(Single-use plastics)	발생량(2019년)
일회용 식기류	1,335
일회용 접시류	2,007
플라스틱 필름	11,312
합계	14,654

출처: 김정욱 편,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4: 북함위기의 해결방안 모색」, 2024

이러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루과이 정부는 순환경제³⁾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전환하려는 우루과이 정부의 주요 노력을 살펴보면, 2018년 에는 ‘플라스틱 제품법(Law No.19.655)’을 제정했다. 동법에 따라 우루과이 내 모든 플라스틱 봉투는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성 재질이어야 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자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어서 우루과이 정부는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등을 포괄하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최상위 법률인 ‘종합폐기물관리법(No. 19829)’을 제정하였다. 2021년에는 동 법률의 이행을 위한 ‘국가 폐기물 관리 계획(Plan Nacional de Gestion de Residuos, PNGR)’과 국가 차원의 종합 액션플랜 ‘Uruguay + Circular’를 수립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를 촉진하는 등 순환경제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가 여전히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회수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적고 품질이 낮으며, 종류별로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루과이의 플라스틱 재활용은 주로 기계적 방식⁴⁾으로 이뤄지는데,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려면 초기 수집 단계에서 오염이 최소화되고, 이후 종류별로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열악한 수거 인프라와 기술 부족으로 수거량은 물론 품질과 가용성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둘째,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 규제, 경제적 유인책 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우루과이 정부는 관련 법과 계획을 마련했지만, 실질적 이행 전략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민간·공공 부문의 재정 수단 및 실행 재원의 부족이다. 특히 낮은 경쟁력과 자본으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우루과이 중소기업에서는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위한 혁신 기술 도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주요 제약요인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향후 우루과이와의 순환경제 분야 협력 방향은 두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거 및 분류 시스템과 관련 기술의 개선이고, 둘째는 실현할 수 있는 이행전략 수립과 실행 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설계이다.

효과적인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구축하려면 기술적 기반뿐만 아니라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이행력 있는 전략과 자원 조달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며, KSP를 통해 한국의 정책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우루과이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KSP를 통해 우루과이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자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남미 공동 시장(MERCOSUR)과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제도 기반과 높은 환경 정책 의지를 갖춘 우루과이는, 향후 삼각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평가된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루과이를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분야 삼각협력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

LSE Data Science Institute Brief



Christopher Thomas

Policy Fellow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c.thomas18@lse.ac.uk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데이터과학연구소(DSI)는 인공지능 혁신의 중심에 인간과 사회과학적 통찰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AI 발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시가 노동시장, 거버넌스 및 민주적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며, 특히 2026년 9월에 개최될 'AI와 사회과학 글로벌 포럼'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확장할 계획이다. 나아가 DSI는 현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와의 협력을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AI 거버넌스, 규제 샌드박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한-영 양국의 지식 공유와 공동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시가 제시하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is a world-leading university specialising in the social sciences. LSE's multi-disciplinary community spans economics, political science, sociology, law, philosophy, and behavioural science, and is complemented by world-leading expertise in the foundational AI disciplines of mathematics, statistics, and methodology. Collaborating and convening expertise from across the university, the LSE Data Science Institute (DSI) is focused on ensuring the social sciences are at the core of AI advancement.

Underpinning this focus is the recognition that people are at the core of the AI revolution. The most sophisticated AI models are trained on trillions of tokens that capture human communication, behaviours, and interactions, and they are transforming our economies, societies, and institutions. The social sciences offer the academic lenses through which to study and understand people, from individual behaviours to the complex socio-economic systems that shape our world. This understanding is hugely important to shaping AI development. The LSE Data Science Institute's research and capacity building efforts focus on three key questions for AI and social sciences:

1. How can social sciences improve AI?
2. How will AI change our world?
3. How can AI improve social science research?

How can social sciences improve AI?

We are moving towards a world where AI agents will increasingly manage our affairs, our workplaces, schools, and health care systems. For that world to work well, the design of AI agents should draw on the decades of scholarship on competition, coordination, collective decision-making, and cooperation. LSE is partnering with leading AI companies to ensure that LSE's expertise feeds into the design,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I innovations. For example, the Data Science Institute has partnered with Anthropic¹⁾ to host an Economic Futures symposium, convening academic and industry expertise to discuss the impacts of AI on the labour market and explore

1) "Symposium explores the policy and research priorities needed to maximise AI's economic benefits", 2025. 11. 7., <https://www.lse.ac.uk/dsi/news/2025/economic-futures-symposium>

possible policy interventions.

How will AI change our world?

AI is already changing our economies, societies, political systems, and personal lives, altering how we work, how our children learn, and how we interact with the world. To navigate this changed world and to ensure that technological advancement leads to human flourishing, we need to understand these changes and to rethink long-held theoretical and conceptual frameworks. This work is built around three pillars:

(1) Re-imagining work and economic systems for an AI-powered world, where LSE is leading a Flagship Global Forum on AI and the Social Sciences.²⁾ The inaugural Forum will take place at LSE in September 2026, focusing on how AI is reshaping work and how governments, firms, and workers can prepare for the changes ahead. (2) Reinvigorat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governance in the age of AI, where LSE researchers are working closely with policymakers and regulators around the world, offering expertise to help manage the impacts of AI on democratic processes and institutions,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regulatory approaches to facilitate societally beneficial AI development. (3) Spotlighting critical policy sectors, where LSE researchers are driving sector-specific research focused on policy areas such as healthcare and finance where AI is having the most significant impact.

How can AI improve social science research?

The hard sciences are heralding a new era of AI-driven scientific discovery – from impressive improvements in AI's ability to tackle mathematical problems³⁾ to solving the 50-year grand challenge of protein structure prediction.⁴⁾ Yet there is no concerted effort to bring a similar revolution to the social sciences. LSE is working to accelerate this revolution in the social science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I tools to aid social science discovery, and driving methodological innovation to access and make better use of data for AI in social science research.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with Korea

The LSE Data Science Institute is looking forward to a collaboration with Centr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 a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building on established partnerships between researchers at KDI and DSI in the areas of AI governance and standardisation. Future collaboration will enable further sharing of expertise and perspectives between UK and Korean AI ecosystems, to drive forward research and enhance UK-Korea cooperation across AI innovation and regulation.

Areas of interest for future collaboration include AI governance topics, such as the role and emerging impacts of AI regulatory sandboxes for AI governance; measuring and building capability for AI regulation in the UK and Korea; and understanding needs and solutions for regulatory interoperability between UK and Korean AI regulatory systems.

Future collaboration can also build on LSE's flagship Global Forum on AI and the Social Sciences.⁵⁾ The inaugural Forum in September 2026 will address how AI is reshaping labour markets. UK-Korea joint research and knowledge sharing on AI labour market impacts c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solutions to this fast-emerging global challenge. ■

2) "LSE to launch Global Forum on AI and the Social Sciences with \$2m award from the MacArthur Foundation", 2026. 2. 12., <https://www.lse.ac.uk/dsi/news/2026/global-forum-announced>

3) Davide Castelvecchi, "DeepMind and OpenAI models solve math problems at level of top students", *Nature*, 2025. 7. 24.,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5-02343-x>

4) "AlphaFold: a solution to a 50-year-old grand challenge in biology", 2020. 11. 30., <https://deepmind.google/blog/alphafold-a-solution-to-a-50-year-old-grand-challenge-in-biology/>

5) "LSE to launch Global Forum on AI and the Social Sciences with \$2m award from the MacArthur Foundation", 2026. 2. 12., <https://www.lse.ac.uk/dsi/news/2026/global-forum-announced>

스타트업으로 여는 성장 전환: 우즈베키스탄과 KSP의 새로운 도전



윤근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 전문연구원
yoonky3429@kdi.re.kr

성장의 전환점에 선 우즈베키스탄

2025년 12월, 타슈켄트 고등교육과학혁신부 회의실. 콩그라타이 샤리포브(Kongrathay Sharipov)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아스로르 노로브(Asror Norov) 혁신개발청장(직무대행)이 직접 한국 방문단을 맞이했다. 환영 인사로 시작된 회의는 곧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성장 전략을 둘러싼 정책 대화로 이어졌다. 화두는 분명했다. “스타트업을 통해 성장 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연평균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중앙아시아의 신흥 성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2030」과 「디지털 우즈베키스탄2030」 전략으로 혁신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국가 목표로 제시했고, IT Park 설립과 스타트업 세제 감면,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스타트업 수를 5,000개로 확대해 일자리를 최대 2만 개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고, 기업 설립과 금융·통신 절차의 전면 디지털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내륙에 위치한 이중 내륙국(double-landlocked country)이라는 지리적 제약 속에서 디지털 경제와 혁신 산업은 우즈베키스탄에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혁신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이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서 공유된 고민은 더욱 현실적이었다. 창업 기업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 벤처투자는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고, 특히 Series A·B 단계의 자금 공백은 성장의 주요 병목으로 지적되었다. 정책 방향은 설정되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금융 구조와 제도적 환경이 함께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금융

2025/26년 우즈베키스탄과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과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세 가지 연구 축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단계를 경험한 한국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우즈베키스탄에 그대로 적용할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현지 상황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생태계의 강점과 약점, 개선 과제를 식별하고, 이에 기반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는 스타트업 지원 제도 및 규제 환경 정비이다. 창업 단계뿐 아니라 투자, 성장, 회수 단계까지 일관된 제도 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연구기관의 R&D 및 대학 기반 창업 지원이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이

포괄적인 '스타트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제도 공백을 점검하고 한국의 법체계 구축 경험을 공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될 것이다.

셋째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다. 한국 역시 1980년대 정부 주도의 기술금융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모태펀드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등으로 공공이 위험을 일부 분담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다. 이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생태계를 작동시키는 정책금융의 설계로 이해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시장을 대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경험을 공유하여 우즈베키스탄 정책금융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요컨대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벤처기금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적 지원과 비금융적 제도 개선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번 협력사업의 핵심이다.

사진 1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청 전경



자료: 저자 제공

현장에서 답을 찾다

연구진은 2026년 2월 넷째 주에 다시 한번 타슈켄트를 찾아 '현지 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이나 통계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생태계의 실제 작동 방식과 정책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혁신개발청, 재정경제부, 중앙은행, 디지털기술부, IT Park 등 주요 정책기관과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청년 지원기관,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기대를 종합적으로 청취하였다.

면담 결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창업 인재 양성부터 사업화, 투자 연계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단계에서 창업 역량 강화와 대학 기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확대, 초기 창업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대통령령(PQ-59, 2026.2.11.)을 통해, 벤처투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제도 환경 개선이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원 정책의 빠른 확대와는 별개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었다. 투자기관과 관계자들은 초기 단계의 창업 팀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 기준을 충족할 만큼 준비된 스타트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창업 프로그램 확대뿐 아니라 인큐베이션 단계에서 역량 강화, 경험 있는 멘토와 투자 네트워크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었다.

그림 2 디지털기술부 면담



자료: 저자 제공

그림 3 중앙은행 면담



자료: 저자 제공

우즈베키스탄 혁신 생태계를 위한 다음 장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빠른 경제 성장과 젊은 인구 구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와 동시에 투자 생태계의 성숙도, 창업 인재 육성, 제도적 환경 정비 등 다양한 과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 있다.

한국 역시 과거에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과 프로그램이 시장 형성을 뒷받침했고, 이후 민간 투자와 창업 생태계가 점차 확대되며 현재의 구조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우즈베키스탄이 향후 정책금융과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넷째 주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청 관계자 등 정책실무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의 주요 정책과 기관을 직접 소개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사례와 더불어 한국이 겪은 시행착오도 함께 전하고자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KSP 출범 당시부터 함께해 온 원년 협력국이다.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오며 축적된 신뢰는 이번 사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한가운데에서 스타트업을 통한 성장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다. ■

개발도상국 물가·생산성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송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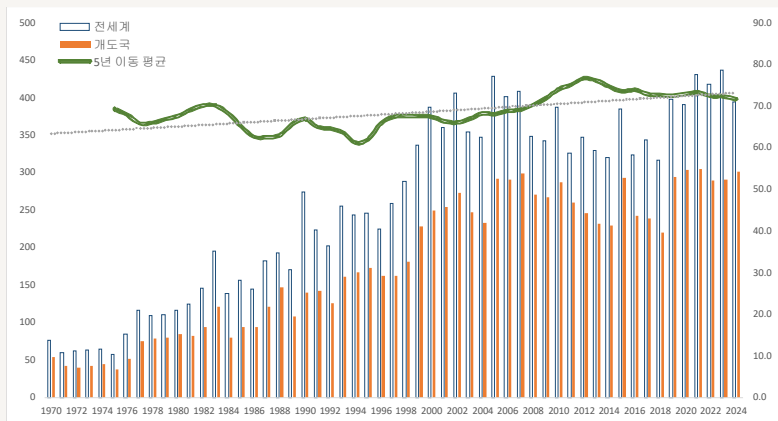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연구원

jesong@kdi.re.kr

연구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재정·제도·기술 역량의 한계로 기후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실제로 전 세계 재난의 약 70%가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생산성과 물가 안정은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빈곤 완화에 핵심 역할을 하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요소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그림 1 전 세계 및 개발도상국의 재해 발생 건수 및 비율 추이



자료: EM-DAT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접속일: 2025년 5월 2일)를 이용하여 계산.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온 상승 및 기후 이상치가 물가와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가별 기후 대응 역량이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완화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적응을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가 인플레이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인플레이션: 이 연구에서는 기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국가 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온 상승은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물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 등을 통해 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국가나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가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등 차별적인 양상을 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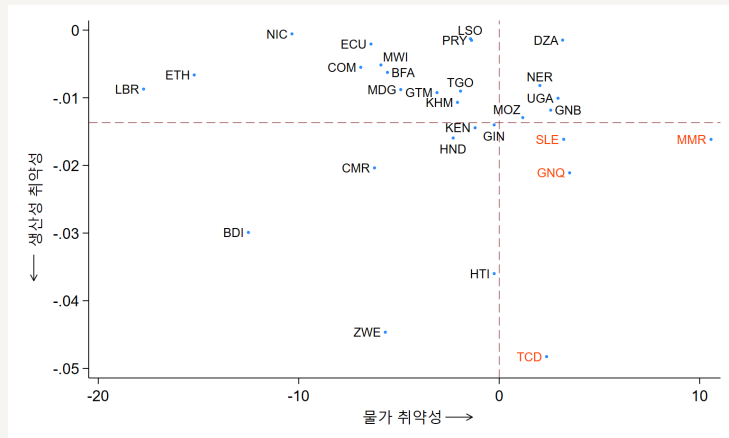
또한 기후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경제 구조와 기후 대응 역량(readiness)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구조와 공급망 특성으로 물가 변동이 크게 나타난 반면, 대응 역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물가 상승 폭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물가 안정과도 관련된 정책 과제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생산성 영향: 이어 기온 상승과 기후 이상치가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총요소생산성,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 이상치는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영향은 저소득국과 중저소득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일부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비교적 완만한 변화 양상을 보여 국가 간 차이를 보였다.

또 생산성 영향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농업 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기후충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후 대응 역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생산성 감소 폭이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영향은 국가의 산업구조와 대응 역량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물가와 생산성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생산성과 물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을 식별하였다. 이들 국가는 기후충격 노출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적응 역량의 제약에 따라 경제적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 및 생산성 취약국 비교



자료: 제2장 및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종합하면,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국가의 적응 역량과 산업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이 기후 적응 역량과 생산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논의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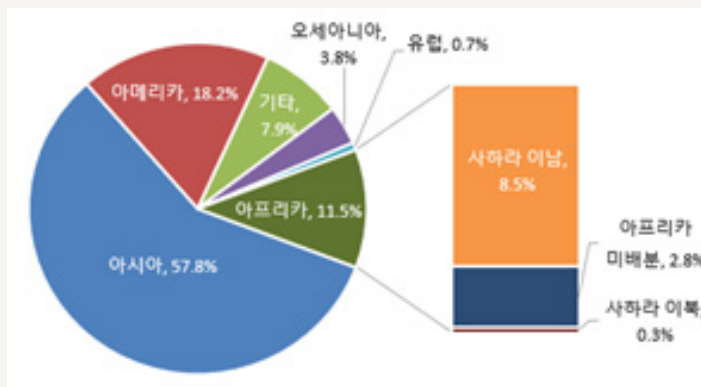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적응과 완화를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충격 증가에 따라 적응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IPCC, UNFCCC, 세계은행, GCF 등)는 기후금융, 기술 이전, 제도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점차 사전적 적응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다만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원 제약과 정책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적응 투자와 사업 추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된다.

종합하면, 개발도상국은 사전적 적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기후금융 부족과 제도적 제약으로 정책 이행에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따라 기후재난 이후 대응에 집중하는 사후적 접근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적응 정책의 효과성도 제한될 수 있다. 최근 COP30 논의에서도 적응 투자 확대가 강조된 만큼, 향후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사전적 적응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 기후 ODA의 현황 및 제약 요인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와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여 한국의 기후 ODA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기후 ODA는 최근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ODA 대비 비율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또한 지원은 아시아 등 특정 지역과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화 등 완화 중심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기후취약성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과 수자원·농업·재난 대응 등 적응 분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 우리나라 기후 ODA의 지역별 배분 비중(2020-2024)



자료: ODA Korea, ODA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접속일: 2025. 6. 27).

사업 추진 측면에서도 몇 가지 제약이 확인된다. 유상·무상 원조 등 다양한 수행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기획-사업-재원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통합적 접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기후 적응과 같이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지속성과 확장성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기후 ODA는 적응 분야 지원 확대와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연구 시사점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의 물가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는 이들 요소에 영향을 미치며 거시경제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국가의 대응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에서는 사전적 적응 중심 대응이 중요하며, 이는 기후충격에 따른 피해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사전적 적응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기후 ODA 추진 방향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의 기후 ODA는 유상·무상 원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완화 중심 구조와 단기 사업 위주 접근,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인다. 향후에는 협력국의 기후취약성을 고려한 적응 중심 접근을 강화하고, 정책기획과 사업 간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YKSP 9기 제1차 포럼 개최 결과 및 시사점



하지유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3팀 전문연구원
jiyu25@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26년 2월 2일 세종 KDI에서 YKSP 9기 제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은 YKSP 참여 인턴들이 KSP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와 추진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정책자문 사업의 기획 및 수행 과정에 대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개회사에서 김정욱 소장은 YKSP 참여자들을 환영하며, 금번 포럼이 KSP 사업 이해와 실무 경험 축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정책자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공유·소통할 것을 당부하며, YKSP 경험이 향후 진로 설계에 의미 있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포럼은 사업 참여 현황 공유를 시작으로, KSP 사업신청서 제안 발표 세션과 국제개발협력 커리어 경험 공유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1세션에서는 카자흐스탄, 태국, 페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2건), 말레이시아, 세르비아 등 총 8개 사업을 대상으로 YKSP가 사업 신청 배경, 자문 요청 사항, 결과 활용 방안 및 사업 확정 결과를 분석·발표하였으며, 각 사업 담당자가 직접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발표 과정에서는 협력국의 정책 환경과 산업 구조, 제도적 한계, 정책 수요 형성 배경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접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각 사업 담당자들은 발표의 충실성과 분석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무 감각을 더욱 높이기 위한 보완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공통적으로는 사업신청서와 최종 사업계획 간 주제 조정의 논리를 보다 설득력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에 대한 분석 강화, 개념 정의의 명확화와 사실관계 검증, 발표자료의 가독성 개선 등이 주요 보완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YKSP 참여자들은 단순한 자료 정리를 넘어, 당초 수요 접수 단계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제안되었던 사업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정교화되는 배경과,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KSP 사업이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협력국의 초기 수요를 바탕으로 현실적 제약과 실행 가능성을 반영해 최적의 자문 과제로 재구성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실제 포럼에서도 협력국의 초기 요구가 다소 포괄적이더라도, 현지 협의와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핵심 과제로 정리되는 흐름이 공유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YKSP 참여자들에게 정책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 자체만이 아니라, 이를 실행 가능한 범위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라는 점을 체감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2세션에서는 UNESCAP 최혜원 전문관이 국제기구 진출 과정, 채용 경로, 요구 역량, 업무 방식 등을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였다. 특히 KSP 경험을 단순한 참여 이력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갈등관리, 일정 조정, 고위급 대응, 협업 경험 등 핵심 역량 단위로 재구성하여 설명함으로써, 각



영역별로 YKSP 참여자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는 YKSP 참여자들에게 현재의 경험이 향후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 설계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금번 포럼은 YKSP 참여자들이 자신이 맡은 사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정책 수요를 분석하는 눈과 발표를 통해 논리를 구성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포럼 참가 소회에서도 사업 이해도와 실무 감각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되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YKSP 참여자들은 단순 지원 인력이 아니라, 사업의 맥락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포럼을 통해 YKSP 참여자들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 사이의 간극을 해석하고,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차별성을 도출하며, 협력국 수요를 정책 언어로 재구성하는 훈련을 지속한다면, KSP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축적은 YKSP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제개발협력과 정책자문 분야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사진 1,2 YKSP 9기 제1차 포럼 당시 사진



자료: 저자 제공

행사

폴란드 인공지능(AI) 세미나 개최

AI Governance and Regulatory Sandboxes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y)와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 바르샤바에서 「AI 거버넌스와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규제 불확실성과 제도 설계에 대한 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AI 규제샌드박스를 실제 정책 설계와 이행에 활용할 핵심 도구로 구체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행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EU 국가의 정책 담당자, 규제기관, 연구자,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전문가 중심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EU 회원국들이 현행 EU AI Act에 따라 2026년 8월까지 AI 규제샌드박스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AI 거버넌스와 연계한 규제샌드박스 설계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AI 확산에 따른 규제와 혁신 간 긴장 관계를 넘어, 공공 신뢰 기반 규제 설계와 규제샌드박스의 정책적 역할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세션 1.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규제샌드박스에서는 EU AI Act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불확실성과 다층적 규제 구조에 따른 제도적 공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샌드박스가 표준화, 세부 입법, 정책 실험을 연결하는 핵심 도구로 제시되었다. 또한 단순 실증을 넘어 공동설계(Co-design)로 기술·규제·표준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어 세션 2. 국가별 경험과 정책 설계에서는 폴란드가 입법(AI Systems Act), 감독기관 설립, 샌드박스 운영을 결합한 구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로써 샌드박스가 규제 학습과 제도 설계에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Sandbox 2.0(혁신 촉진)과 Sandbox 3.0(규제 개선)을 구분해, 샌드박스가 시장 진입 지원을 넘어 증거 기반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험 체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EU AI Act 및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다층적 규제 체계 때문에 완전한 규제 예외 적용이 어렵고, 규제 공백의 정의와 개선 시점이 불명확한 어려움이 공유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기관 간 협력과 실증 결과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세션 3. 이행, 실증 및 민간 활용 사례에서는 한국과 EU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신속확인), 규제 준수 경로 설계, 실증 결과를 법·제도 개선으로 환류하는 메커니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공유되었다. 이로써 샌드박스가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실질적 작동 구조로 기능함이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샌드박스는 규제 예외가 아닌 “Regulatory Learning System”으로 재정의되었다. 세미나 후반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전문성 확보, 중소기업 접근성 제고, 중앙-분산 거버넌스 간 조정 등 향후 제도화 과정의 핵심 과제가 제시되었다.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연구 및 협력 실적

💡 2025년 국제개발협력연구

<p>I. 개발협력 정책연구</p>	<p>경제안보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식량·물·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식량·물·에너지 안보 관련 개념 및 국제 동향 분석 ■ 아시아 중점협력국의 식량안보 수준과 현안 분석 ■ 에너지안보 개념 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전략 분석 ■ 식량·물·에너지 넥서스 기반 안보 개념 확립 및 국제개발협력 가능성 협력방안 도출 <hr/> <p>개발도상국 물가·생산성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비선형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후변화와 생산성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제기구·지역별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동향 및 전략 분석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adaptation)으로의 국제개발협력 시사점 도출
<p>II. 지역·국가 심층연구</p>	<p>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공유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요인 및 효과 분석 ■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사례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경험 분석 ■ 한국과 베트남 경제구역 비교를 통한 한국기업 참여 전략 제시 ■ 관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hr/> <p>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역내무역 추이 및 경제통합 현황 분석 ■ AfCFTA 협정 주요 내용 및 의의 검토 ■ RTA 효과 분석을 통한 AfCFTA 이행 시사점 도출 ■ AfCFTA를 활용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 모색 <hr/> <p>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분석: 아태지역의 무역환경을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아태지역 무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 ■ 국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여 한국의 기후 ODA 및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hr/> <p>디지털 전환과 디지털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특징 분석 ■ 디지털 무역 이론 및 ASEAN·인도-태평양 지역 정책·규제 동향 분석 ■ 디지털 전환과 무역 확대가 개도국 성장·무역·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도출 ■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
<p>III. 한국발전경험 체계화 연구</p>	<p>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5: 사례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력국의 분야별 정책사례에 대한 개별적 연구·조사(Case Study) ■ 몽골/주택금융, 베트남/농촌개발, 코스타리카/탈탄소, 헝가리/교통 정책의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 및 요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KSP, EIPP 정책자문사업에 시사점 도출

 국제협력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개발원조(ODA) 전정부적(Whole of Government) 조정 거버넌스 공동연구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yond Boundaries: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for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아시아개발은행 (ADB)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지원
아시아생산성기구 (APO)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5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4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중고소득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3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2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세계은행(WB)	20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제도의 디지털화와 접근성 강화에 관한 가이드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VID-19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영향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숙련도 제고 정책연구사업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3차(카메룬, 서부발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2차(10개국 개별 사업 및 성장 모형, 공기업 개혁 연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1차(8개국 개별 사업 및 거시경제, 포괄적 성장 연구)
미주개발은행 (IDB)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B Invest 협력사업: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연구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 서비스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연수·연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RD-KDI 공동 민관협력(PPP)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사업
유엔개발계획 (UNDP)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계획 정책자문 사업
적도기니 재정경제기획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도기니 국가개발계획 자문사업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에미리트 ADFD 수출금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사업

 국제 행사

<p>2025</p>	<p>KDI-LPEM 공동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5년 8월 21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제: 불확실성 시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 방안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5년 12월 11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제: 중소기업(MSME)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p>2025 KDI-World Bank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5년 9월 25일 / 서울 주제: 경제 전환을 위한 AI: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 파트너십 구축 <p>영국 앨런튜링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 인공지능 표준 및 규제 공동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5년 11월 18일 / 영국 런던 주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AI 표준화 및 규제 제도 방안 <p>ADB: 정책라운드테이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5년 12월 9일-10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제: 질적 성장을 위한 아시아 미래 번영 구축
<p>2024</p>	<p>세계은행: KDI-세계은행 녹색성장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4년 2월 28일 / 워싱턴D.C. 주제: Green Transition Strategy, Green Transition Financing, Carbon Pricing 등 <p>브루킹스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4년 10월 22일 / 워싱턴D.C. 주제: Digital Technology,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 <p>ADB: 2024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4년 12월 17일(화) / 동경 주제: 글로벌 공급망과 지속가능발전 <p>헝가리 인공지능 정책 및 규제 제도 공동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4년 10월 3일 / 헝가리 부다페스트 주제: 인공지능 정책과 규제 제도 방안: 규제, 공공서비스, 혁신
<p>2023</p>	<p>브루킹스 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3년 4월 11일 / 워싱턴D.C. 주제: Productivity in a Time of Change <p>ADB: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3년 5월 2일 / 인천 송도 주제: 아시아 복합위기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이후 재정관리체계 등 <p>ADB: ADB 연차총회 부대행사“KDI-ADB 공동세미나: 디지털, 기후, 그리고 회복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3년 5월 4일 / 인천 송도 주제: 디지털 전환과 기후 효과 <p>세계은행 TDLC: 2023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3년 11월 17일 / 인천 송도 주제: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도시 정책, 지식기반 발전 등
<p>2022</p>	<p>2022 KDI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 / 서울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p>2020</p>	<p>2020 KDI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11월 19일(목) 14:00~16:00 / 서울 주제: 개발을 위한 혁신 *기업과 혁신, 도시와 혁신, 기술과 혁신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2026년 1호 ▶	
이슈톡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그 이후: 한국 개발협력의 나아갈 길 한승헌 Revitalising the narrativ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case of Germany Niels Keijzer
동향 분석	인도네시아 플랫폼 경제 현황 이미연
KSP 포커스	[2024/25 인도네시아 KSP]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투자 촉진과 제도적 과제 김희라
CID 연구포커스	아태지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 및 대응 방안 윤지희
2025년 4호 ▶	
2025년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KDI 조동철 원장 기조연설 「KSP,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 패널 토론 주요 내용 행사 스케치
이슈톡	KSP와 EDCF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제언 박종규 ▶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 AI 에이전트와 표준 경쟁 이강찬 Australia's Climate Change Prior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hips 호주 외교통상부
동향 분석	일상과 산업의 숨은 힘, 측정과학을 통한 KSP 협력 김광섭 ▶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 한국 농업개발협력의 전략과 과제 김태화
KSP 포커스	[2024/25 키르기스공화국 KSP]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ODA 모니터링·평가 역량 강화 성현지 [2024/25 폴란드 KSP] KSP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AI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의제 구축 이세훈
CID 연구포커스	디지털 전환 시대, 페루 보건의료 혁신과 한-페루 협력 가능성 홍기현
2025년 특별호 ▶	
특별호	국제 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사업(KSP)의 역할 강성진 주요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광재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과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홍성창, 방호경
이슈톡	EIPP는 KSP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손의영 ▶ AI를 위한 NETWORK 이정기
동향분석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도전과제와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윤지희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한-말레이시아 협력과제 송지은
KSP/EIPP 포커스	Accelerating Digital Synergies: What Opportunities for a Strengthened EU-ROK Partnership? Giulia Torchio 디지털 금융 혁신과 국제개발협력: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사례를 통한 시사점 우혜영, 정희선 ▶ 온두라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식공유 성과 최진아
CID 연구포커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쟁점 및 현안: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김대용, 김지원 ▶


2025년 2호 ▶	
이슈톡	지식공유사업(KSP)이 나아갈 방향 손욱 핀테크(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소득 불균형 이종화
동향 분석	칠레 핵심광물 개발 현황과 한-칠레 공급망 협력 방안 강나연 한-호주 기술협력 사례로 본 공급망 안정화 전영진
KSP 포커스	[2024/25 온두라스II KSP] 인프라 및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서예주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의 지식공유 여정 최진아
CID 연구포커스	디지털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김민정, 노다현 ▶
2025년 1호 ▶	
이슈톡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금융의 역할 고승범 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저탄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강성철 ▶
동향 분석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협력사업(PPP) 구석모 ▶ 2025년 세계건설시장 유망 섹터 전망 및 시사점 정지훈
KSP 포커스	튀르키예: 수입대체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윤근영 페루: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박미서
CID 연구포커스	개발도상국 개발금융 역량강화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김대용, 이진이
2024년 특별호 ▶	
이슈톡	기후위기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동향 강성진 ▶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 박지형 디지털 격차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동향 김서용
동향 분석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선이 ▶
KSP 포커스	[2023/24 불가리아 KSP] 미래에 대응하는 불가리아 건설사업의 도전과 기회 김지원
CID 연구포커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방호경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최다인, 하지유
2024년 3호 ▶	
이슈톡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로 패러다임 변화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최희주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과 우리 기업의 대응 오범택 ▶
동향분석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권혁신 ▶ 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한국의 기여: GPEDC와 부산포럼을 중심으로 송지선
KSP/EIPP 포커스	헝가리 EIPP: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최효정, 안치영
CID 연구포커스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남보라, 김하아람

2024년 2호 ▶	
이슈톡	기후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 정홍상 ▶ 디지털헬스케어의 중요성 및 지식공유의 의미 강재헌
동향 분석	국내 수소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이슬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수도이전 국제협력 추진방안 방설아 ▶
KSP 포커스	[2023/24 칠레 KSP] 병원 대기 끝에 죽음이 아닌,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홍기현
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과제 김대용, 황서영
2024년 1호 ▶	
이슈톡	ESG와 국제개발협력 정무경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정지훈 ▶
동향 분석	순환경제로의 전환, EU는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나? 박상우 중동정세와 향후 전망 강문수 ▶
KSP 포커스	리투아니아와 문화창의산업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안치영
CID 연구포커스	아프리카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제개발협력 우혜영, 이소희
2023년 특별호 ▶	
이슈톡	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김은주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권을 ▶ 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호경, 이소희
동향 분석	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이요한 ▶ 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김은경 ▶ 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정상희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김은지 ▶
KSP 포커스	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윤근영
CID 연구포커스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
2023년 3호 ▶	
이슈톡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김연규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정창구
동향 분석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이미연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오정은 ▶
KSP 포커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이세훈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서규혁
CID 연구포커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이진이

2023년 2호 ▶	
이슈톡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안충영 ▶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이준희 ▶
동향 분석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강경재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김준
KSP 포커스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노보배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한재현
CID 연구포커스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우혜영
2023년 1호 ▶	
이슈톡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임호열 ▶ 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성한경
동향 분석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김은주 ▶ 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이재광 ▶ 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황금물결
KSP 포커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유성희
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김대용, 이소희
2022년 3호 ▶	
이슈톡	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정성철 ▶ 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김성규 ▶
동향분석	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홍문숙 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김유나, 홍은선
CID 연구포커스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김정옥, 윤지희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
2022년 2호 ▶	
이슈톡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윤석현
동향 분석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김지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황금물결 ▶
KSP/EIPP 포커스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김하아람
CID 연구포커스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홍성창

2022년 1호 

<p>이슈톡</p>	<p>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장은혜</p>
<p>동향 분석</p>	<p>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김예림</p>
<p>KSP/EIPP 포커스</p>	<p>[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김지원,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송지은</p>
<p>CID 연구포커스</p>	<p>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우혜영</p>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지식공유 Brief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문의 박지은 연구원(044-550-4421, jieunp@kdi.re.kr)

발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발행인 김정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편집위원 윤지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편집간사 박지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문의 044-550-4421,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